



# 이슈와 논점



이슈와 논점 | 제1465호 | 2018년 5월 9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이내영 | www.nars.go.kr

##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중국의 평가와 시사점

김 예 경 \*

### 1. 들어가며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 간의 역사적인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 분위기가 급속도로 조성되고 있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 등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이루어가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남·북 당사자 간의 주도적인 해결이 우선이지만 미·중·일·러 등 주변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또한 필수적이다. 특히 「판문점선언」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중국의 참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 3원칙’과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쌍궤병행(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모색해 왔다. 최근에는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로서 평화체제 논의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5월 중에 개최될 북·미 회담의 성과에 따라 평화체제 논의에도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향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중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대응방향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언론 및 전문가의 견해를 정리해 보고 주요 쟁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중국측 평가

#### (1) 긍정론

중국 정부는 ‘4.27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다. 화춘잉(华春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딘 데 대해 박수를 보내고 두 정상의 정치적 결단과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중국의 문호 루쉰(鲁迅)의 시구를 인용해 “온갖 어려움을 겪고도 형제간의 정이 있어서 서로 만나 한번 웃으니 원한을 다 씻어버릴 수 있

다(渡尽劫波兄弟在, 相逢一笑泯恩仇)”며, “중국은 역사적인 이번 회담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루캉(陆慷) 외교부 대변인도 외교부성명을 통해 “남·북 정상은 성공적으로 회담을 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거둔 긍정적인 성과는 남·북 간 화해 및 협력,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sup>1)</sup> 5월2일 평양을 방문한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북한의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방안과 경제건설을 지지하며, 최근에 한반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세변화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미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며, “중국은 북한과의 소통을 강화해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으로도 상응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중국의 일부 언론 및 전문가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과거 김정은과의 만남을 놓고 빈번하게 입장을 번복해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며, 한국은 북·미 정상회담의 제3자가 아니며, 여기에 참여하거나 관련 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sup>2)</sup> 또한 중국 랴오닝 대학 리자청(李家成) 연구원은 핵 폐기에 대한 북·미 간 의견차를 조율하기 위해 한국이 양측

사이에서 중재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sup>3)</sup>

## (2) 신중론

그러나 중국의 일부 전문가는 「판문점선언」이 북측 핵 폐기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결여되어 있어 한반도 비핵화에 이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순싱제(孙兴杰) 중국 지린대학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자체에 회의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않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얘기도 없다”며 “비핵화의 정의를 한국이 과대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펑(朱锋) 중국 난징대 교수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판문점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대해 중요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계획·시간표가 없는 건 한계라고 지적하며,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sup>4)</sup> 또한 왕샤오링(王晓玲)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판문점 선언」이 실현될지 여부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 및 향후 북한의 관련 행보를 지켜봐야한다면서, 안보리가 제재를 풀지 않고 대북 압박을 계속한다면 한국은 한반도 화해를 추진하는데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 중앙당교 장롄구이(张琏瑰) 교수는 “이제 모든 것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미국이 자국 이익만을 생각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자세만 유지한

1) “华春莹谈朝韩领导人会晤：相逢一笑泯恩仇”，『中国新闻网』，2018年4月27日；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外交部发言人陆慷就朝韩领导人会晤发表谈话”，2018年4月27日。

2) “社评：朝韩峰会取得成果，美国应顺势而为”，『环球时报』，2018年4月27日。

3) “朝韩首脑峰会：半岛和平新起点”，『光明日报』，2018年4月30日。

4) “中 참여않는 南北美 3자 평화협정은 합법성 결여”，『동아일보』，2018년4월30일。

다면 한반도 비핵화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 3. 중국 역할의 ‘주변화’ 관련 중국 내 논의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에서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의 중국 참여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적 입장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의 견해에는 확연히 이견이 존재하는 바, 구체적으로는 ‘중국배제설’과 ‘역할주장론’이다.

중국 배제설은 중국 화동사범대학의 셴즈화(沈志华)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 서방 및 홍콩 언론을 통해 전파되면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셴즈화 교수의 주장은 “남북정상회담의 실질적 성과가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이 “북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이며 중국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현재 중국이 대화에서 배제되더라도 “중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无可奈何)”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따라서 중국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sup>5)</sup>

중국 중앙당교 장롄구이(张琏瑰) 교수 또한 유사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간 회담에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중국 외교부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한 발짝 멀리 떨어진 입장을 보여왔고, 북한과 미국이 직접적으로 대화해서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한 “현재 상황은 중국의 통제권 밖에 있으며 다자간 회담에 중국

이 배제된다 해도 놀랄게 하나도 없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반면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4자회담 방식으로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상당수에 달한다. 주평(朱锋) 난징대 교수는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남·북·미) 3자 평화협정은 사실상 합법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판문점 선언에 대해 환영의사를 나타내면서도 ‘평화협정의 남·북·미 3자 회담’ 거론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링성리(凌勝利) 중국 외교학원 교수 또한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화해의 과정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sup>6)</sup> 중국 인민대 청샤오허(成晓河) 교수는 3자회담 이후 중국이 4자회담, 또는 6자회담 방식으로 어떻게든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배제된다면 중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에 비핵화에 대한 상호신뢰가 깨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국 랴오닝사회과학원의 루차오(陆超) 연구원 또한 중국이 정전협정 서명국으로서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자회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며 국제법적으로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기 위한 것이라면 당초 정전협정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게 맞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5) “评论: 朝韩美或签和平协定 中国被踢出局?”, 『美国之音』, 2018년 4월 27일.

6) 凌胜利, “半岛缓和 中国支持”, 『光明日报』, 2018년 4월 29일.

## 4.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방향

### (1) 시사점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중국 배제가능설이나 역할주장론 등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주장이 더 신빙성을 갖는지에 대해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되어 관망의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 배제설을 일축시키고 평화협정의 체결자로서 참여하기 위한 물밑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중국 지도부의 언사와 대외행보에 대한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부 장관 내정자의 평양방문,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왕이 외교부장의 평양방문 등을 파편적인 별개의 사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한·미, 북·미, 북·중 정상회담 등 빅 이벤트가 계획되어 있는 가운데 어느 사안에 대해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될지도 단정하기 어렵다. 필요한 사안에 따라 남·북·미·중이 일사분란하게 상호 조율을 통해 긴밀히 협의할 필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이징 방문 이후, 긴밀해지고 있는 북·중관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 4월22일 북한 황해북도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주북한 중국대사관과 중국인 부상자가 입원한 병원을 직접 찾아 위로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이후 리용호 외무상의 초청으로 왕이 외교부장의 방북이 이루어졌다.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이징 방문 이후 6월

시진핑 주석의 평양방문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어, 이러한 북·중관계의 회복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하다.

### (2) 한국의 대응방향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은 남·북이 중심이 되어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국가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를 경우 기민한 소통과 조율을 통해 협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으며, 각국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균형적인 태도를 이어가야 할 노련함이 필요하다.

극히 일부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중에는 중국이 배제되는 평화협정 논의가 국제법에서 위배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기는 하나 동 사안이 국제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관련한 학계 차원에서의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평화협정 체결 참여 여부가 쟁점화되어 한·중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외교적인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평화협정의 방식과 절차를 논의하는 데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좀 더 세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한반도 종전선언과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와 절차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 변수’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소모적일 수 있으며, 중국의 참여 여부 또한 유연하고 적절하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열린 결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